

청년여성은 어디로, 왜 떠나는가? 청년층 지역 이동의 성별 차이와 노동시장 특성

2025. 12. 30.

성인지통계센터 조선미 부연구위원

- 1) 청년여성의 지역 이탈은 노동 중심 생애전망 속에서 지역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와 구조적 제약이 누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국정과제에서도 여성의 경력 지속 가능한 지역 노동시장 조성이 인구감소 대응과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로 제시되었음.
- 2) 본 연구는 청년층 지역이동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고, 여성 고용률과 산업·직종별 성별 분리 수준 등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이 청년여성의 지역 이탈 및 정주 선택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규명하였음. 이를 통해 청년여성의 기회실현과 경력 지속을 제약하는 지역 여건을 진단하여 성별 관점을 반영한 지역 인구정책과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3) 청년층은 남녀 모두 '직업'이 가장 주된 이동 사유로 청년기 노동중심적 생애의 보편화가 지역 이동 양상에서도 확인되었으나, 청년여성은 지방 이탈과 수도권·대도시로의 집중 경향이 청년남성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났음. 청년여성은 성인 진입기부터 대도시로 이주하거나 수도권·대도시 내 이동 비중이 높은 반면, 청년남성은 상대적으로 비수도권·비대도시로의 분산이 나타나 지역 이동에서의 성별 차이가 확인되었음. 또한 청년남성은 직업·교육 등 개인성취 목적의 이동이 좀 더 많았고, 청년여성은 상대적으로 주택, 가족, 주거환경 등 비중이 높아 가족 중심적 동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정주여건을 고려한 이동이 나타났음.
- 4)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청년여성 고용률이 높고 노동시장의 직·산업 성별 분리 수준이 낮을수록 청년여성의 순유입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음. 반대로 성별 분리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도시를 중심으로 청년여성의 순유출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성별 분리 구조가 강한 지역은 도시·읍면 유형과 무관하게 30~40대 양육집중기 여성의 고용률 저하와도 연관되었음. 성별 분리된 노동시장 구조는 여성의 중·장기적 경력 지속을 제약하는 조건과 맞물려 있으며, 노동 중심적 생애를 기획하는 청년여성에게 지역에서의 삶을 지속 가능한 선택지로서 기대하기 어렵게 하면서 청년기 초기부터 지역 이탈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5) 분석자료는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지역별고용조사」, 「인구동향조사」 등의 원자료와 KOSIS 공표자료를 활용하였음. 분석 기준시점은 2024년, 분석단위는 시도 17개 및 시군구 229개 지역이며, 분석방법은 청년여성의 지역이동 및 지역 여성고용 현황과 관련된 지표들의 지역별 분포 및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았음.

I. 서론

오늘날 청년여성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삶의 기회 실현을 중심으로 지역 이동과 정주를 선택하고 있음. 본 연구는 청년층 지역 이동의 성별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이 청년여성의 이주 및 정주 선택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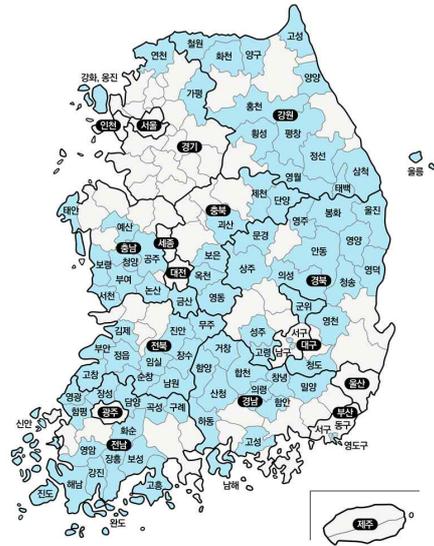
- 청년층의 지역 유출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특히 20~30대 청년여성들의 지역이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청년세대는 남녀 모두 노동 중심적 생애를 지향하는 가운데(김은지 외, 2019), 청년여성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경력 지속을 위한 삶의 전망과 기회실현에서 구조적 제약과 성별 격차를 경험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조선미 외, 2023).
- 최근 정책현안에서는 소멸위기 지역을 위한 균형성장 추진과 함께, 성평등한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지역 중심 여성 일자리 발굴을 통한 여성인력 유출 완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음.
 - 2025년 8월 발표된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국정목표 ③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의 “(국정과제 54)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등 자치분권 기반 지역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 현안으로 제시하였음. 여성노동 분야에서는 “국정과제 97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성평등한 일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국정기획위원회, 2025.8.).
 - 2025년 4월 발표된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은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역량 강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 설계 지원 등을 포함한 5대 정책 영역을 제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성평등가족부 주관 세부과제로 “지역 중심 여성 일자리 발굴체계 마련”이 제시되어 여성이 거주지역의 핵심산업 진출 지원을 통한 지역 여성인력 유출 완화가 정책목표로 제안되었음.
- 여성은 가족 중심 생애, 남성은 노동 중심의 생애를 추구하였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 청년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하게 일자리를 통한 기회실현을 청년기의 우선 과업으로 지향하고 있음. 청년층은 일·가족에 대한 미래의 삶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지역 이주와 정주를 선택하므로, 청년층의 일자리 충족 욕구와 분리되어 혼인·출산 등 가족구성 중심의 생애를 강화하는 지원 정책 단독만으로는 청년층과 청년여성의 지역이탈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정책당사자인 청년층의 실제 욕구를 파악하고 변화된 생애전망에 조응한 정책을 설계할 때 소멸위기 지역의 효과적 인구감소 위기 대응이 가능할 것임.
- 지역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는 청년여성에게 일자리를 통한 삶의 기회실현을 제약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지역 이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음.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별 분리가 강한 지역에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로 분절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경력축적 제약과 경력단절 위험을 누적시키면서 성별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음(김하영, 2025; 문영만·김희경, 2024). 이는 지역 내 여성의 일자리 선택 가능성을 제약하고 생애 전반에 걸쳐 노동성과를 낮추게 되므로, 노동 중심의 생애를 기획하는 청년여성에게 정주보다 수도권 또는 인근 대도시로의 이동을 선택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음.
 - 실제로 2022년 전국 20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 유형화 분석결과 노동시장의 직·산업 성별분리

수준이 높은 지역 유형은 여성의 저임금 구조와 함께 청년여성의 뚜렷한 지역 이탈 경향이 확인되었음(조선미 외, 2023:140).

- 본 연구는 청년층의 성별 지역이동 현황을 살펴보고, 여성 고용률, 산업별·직종별 성별분리 등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이 지역 여성들의 생애 노동 지속 가능성(경력단절 위험이 높은 30~49세 여성 고용률) 및 이에 따른 청년여성들의 지역 정주 선택(지역 이주의 개념으로서 청년여성 시도 권역 간 이동에 의한 순 유출율)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분석하였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 관련 지원이 제공되며, 2025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은 다음과 같음.

〈표 1-1〉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 고시(2025년 12월 기준)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	지정 결과(2025년 12월 기준)
지정근거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5호(2024.2.27.).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78호(2025.12.24.)	
부산	(3개) 동구, 서구, 영도구	(2개) 금정구, 중구	
대구	(3개) 남구, 서구, 군위군	-	
인천	(2개) 강화군, 옹진군	(1개) 동구	
경기	(2개) 가평군, 연천군	(2개)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	(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4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충북	(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	(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	(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1개) 익산시	
전남	(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	(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2개) 경주시, 김천시	
경남	(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2개) 사천시, 통영시	



출처: 1. 인구감소지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시행 2024. 2. 27.]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2024. 2. 27., 일부개정]),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인구감소지역지정변경고시/\(2024-15,20240227\)](https://www.law.go.kr/행정규칙/인구감소지역지정변경고시/(2024-15,20240227)) (최종 접속일: 2025.12.30.)
 2. 인구감소관심지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시행 2026. 1. 1.] [행정안전부고시 제 2025-78호, 2025. 12. 24., 제정]),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인구감소관심지역지정고시/\(2025-78,20251224\)](https://www.law.go.kr/행정규칙/인구감소관심지역지정고시/(2025-78,20251224)) (최종 접속일: 2025.12.30.)
 3. 우측 그림: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최종 접속일: 2025.12.30.)

○ 분석자료는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구동향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등 원자료 및 KOSIS 공표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지역 단위의 인구동향과 여성 경제활동을 분석함.

- 분석단위: 시도(광역시) 17개 및 시군구 229개(기초지자체 226개, 행정시 2개, 세종시 1개)
- 분석시점: 2024년

〈표 1-2〉 분석자료: 원자료 및 공표자료

유형	내용	출처
원자료	이동사유, 이동유형	•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세대 관련 연간자료
	성별 분리지수	•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2024년 하반기(A형)
KOSIS 공표자료	순이동률	• KOSIS(국가통계포털), 국내인구이동통계, 시군구/성/연령(5세)별 순이동자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2&conn_path=l2 , • KOSIS(국가통계포털), 국내인구이동통계, 시군구/연령(5세)별 이동자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_A03&conn_path=l2 • KOSIS(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2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_1&conn_path=l2
	여성 고용률	• KOSIS(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 (여자),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A03_A03S&conn_path=l2

II. 청년층의 지역 유출과 성별 차이

1. 청년층의 지역이동 현황

2024년 순이동률에서 청년여성의 지방 이탈과 수도권 집중은 청년남성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남.

- 청년층의 지역 이동에 대한 성별 현황을 2024년 순 이동률¹⁾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청년층의 정의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²⁾,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20~34세³⁾를 기준으로 하되 1)10대(진로 계획), 20대(독립 및 첫 경력 설계) 및 30대(가족구성과 일·가족양립)의 세대별 주요 생애과업별 요구도가 다르고, 2)2025년 기준 다수 기초지자체 조례상 청년연령 상한이 39세(130개)에 이르는 점(조종오, 2025.3.20.)을 고려하여 청소년·성인진입기(15~19세), 20대(20~29세), 30대(30~39세)로 구분하여 추가로 살펴보았음.
- 청년여성과 청년남성의 지역 유출 현황을 광역 및 기초단위로 살펴보았음([그림 II-1], [그림 II-2]). 청년층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세종시에서는 순유입이, 강원, 전북·전남, 경북·경남, 제주,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는 순유출이 나타나는 공통된 경향을 보임. 성별로는 청년여성의 지방 이탈과 수도권 집중 경향은 청년남성보다 더 뚜렷하고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17개 시도 중 청년층의 순유입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여성 2.30, 남성 2.27임(<표 II-1>).
 - 청년층의 순유출이 높은 지역은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호남권과 영남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북(여성 -3.03, 남성 -2.49), 전남(여성 -2.40, 남성 -2.54), 경북(여성 -2.82, 남성 -1.80), 경남(여성 -2.56, 남성 -1.97) 등으로 나타남(<표 II-1>).

<표 II-1> 청년층 성별 유출 현황(20~34세): 시도별 순이동률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여성	1.20	-1.21	-1.46	1.42	-2.10	-0.14	-1.49	2.30	1.09	-1.98	-0.80	-0.03	-3.03	-2.40	-2.82	-2.56	-1.98
남성	0.96	-1.36	-1.56	1.23	-1.66	0.38	0.22	2.27	1.01	-1.93	-0.44	0.89	-2.49	-2.54	-1.80	-1.97	-2.13
여·남	0.24	0.15	0.09	0.19	-0.43	-0.51	-1.71	0.03	0.07	-0.05	-0.36	-0.92	-0.54	0.14	-1.02	-0.59	0.14

주: 파란색 음영=남성 대비 여성의 순유출이 절대 규모와 성별 격차 모두에서 두드러진 지역 의미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구동향조사」, 2024년 KOSIS 공표값에서 가공산출.

출처: KOSIS(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최종 접속일: 2025.1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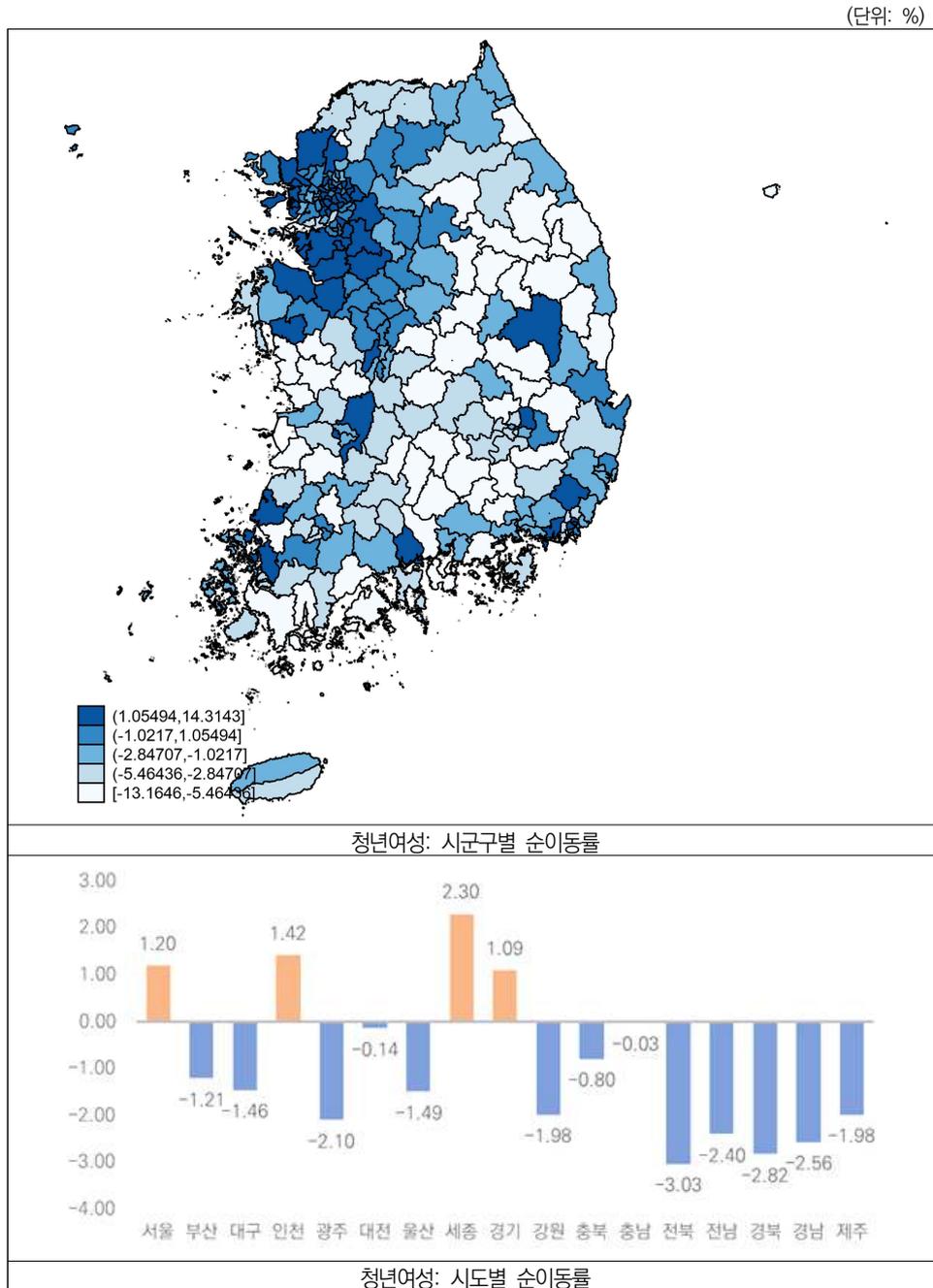
- 충남, 대전, 울산의 경우 청년남성은 순유입, 청년여성은 순유출로 성별 이동 경향이 대비되는 지역으로, 지역 일자리 구조나 고등교육 전공계열이 남성 중심 분야에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함.
- 청년층의 성별 유출률의 격차가 높은 지역 울산(여성 -1.49, 남성 0.22), 경북(여성 -2.82, 남성 -1.80) 등임(<표 II-1>). 울산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 구조로 인해 여성의 일자리 선택이 제한되면서 청년여성의 유출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상황이며⁴⁾, 경북 또한 포항시, 구미시 등 도시지역은 제조업 중심

1) 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를 차감한 순이동자 수를 연앙인구 100명당 이동률로 나타낸 지표로, 양(+)의 값은 순유입, 음(-)의 값은 순유출을 의미함.

2) 예시로, 「청년기본법」은 만19~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만15~29세로 정의함.

3) 만19~34세가 「청년기본법」 상 청년 연령이나 통계적 범주 산출의 편의를 위해 20~34세를 활용함.

의 지역산업 특성상 여성 일자리 제약이 높은 공통된 특성을 가지며,⁵⁾ 특히 전반적으로 수도권 대비 청년층의 고용률, 임금, 상용근로자 등 근로조건이 낮게 보고되었음(동북지방통계청 보도자료, 2024.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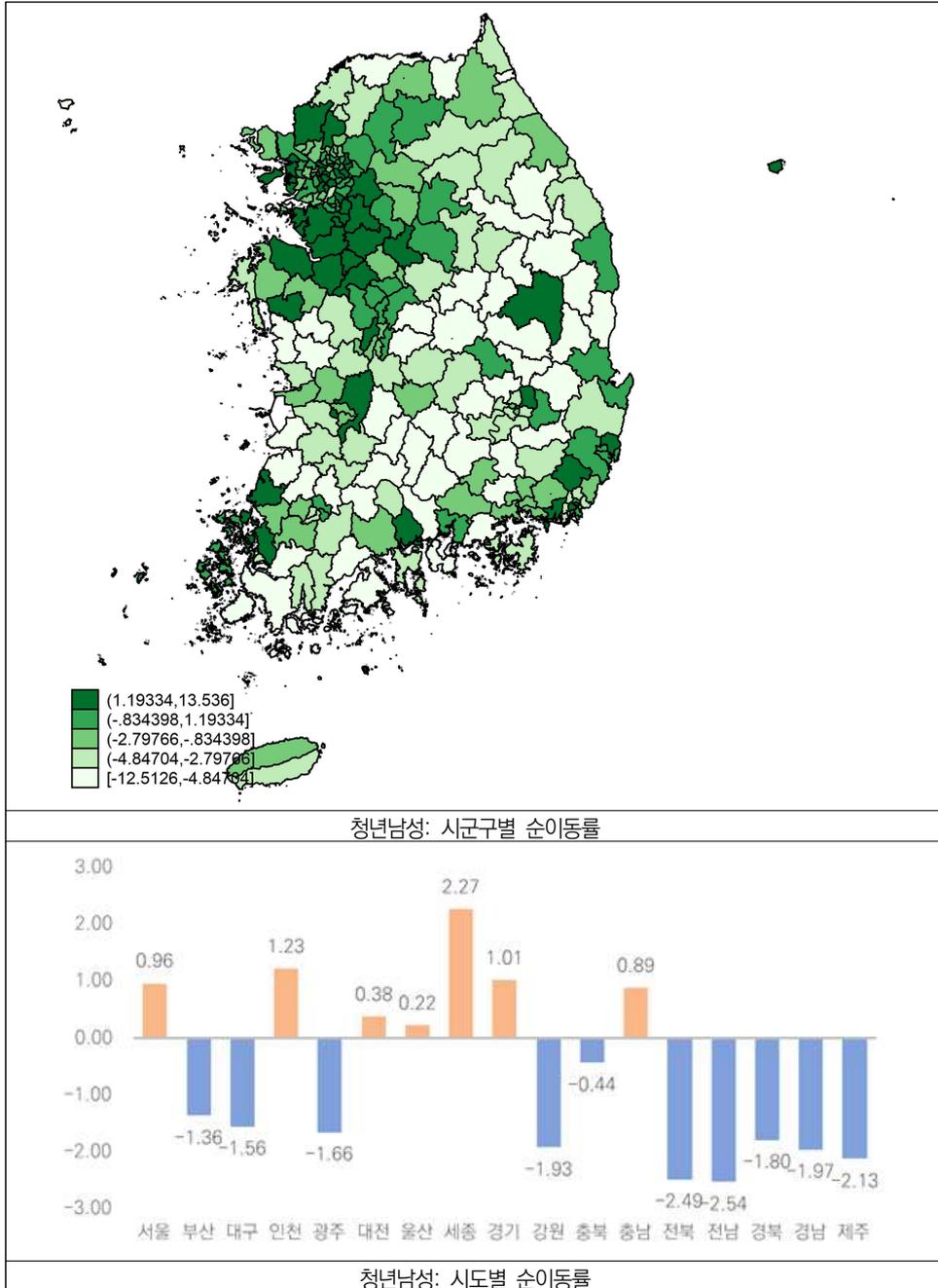


주: 상단 지도=순이동률 분포를 5분위수(quantile) 기준으로 구간 구분.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구동향조사」, 2024년 KOSIS 공표값에서 가공산출.
 출처: KOSIS(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최종 접속일: 2025.12.30.).

[그림 II-1] 청년여성 유출 현황(20~34세): 시도 및 시군구별 순이동률

4) 연합뉴스(2023.10.31.). 울산 청년·여성인구 유출, 원인은 '취업'...'양질 일자리 필요', 허광무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31031155200057> (최종 접속일: 2025.12.30.)
 5) MBC 뉴스(2023.01.13.). 50만 무너진 포항·청년 여성이 떠난다, 장미쁨 기자,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5497_36199.html (최종 접속일: 2025.12.30.)

(단위: %)



주: 상단 지도=순이동률 분포를 5분위수(quantile) 기준으로 구간 구분.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구동향조사」, 2024년 KOSIS 공표값에서 가공산출.
 출처: KOSIS(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최종 접속일: 2025.12.30.).

[그림 11-2] 청년남성 유출 현황(20~34세): 시도 및 시군구별 순이동률

청년층의 지역 이동은 20대에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청년여성은 남성보다 지역 이탈과 수도권·대도시 유입이 규모·강도 및 집중도에 있어 뚜렷하였음. 이는 생애단계별 이동 특성과 노동·정주 여건의 성별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소멸위기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이 필요함을 의미함.

- 청년층의 유출 및 유입 상위 10개 지역을 시군구 단위에서 연령 구간을 세분화하여(15~19세, 20대, 30대, 20~34세) 살펴보았음.
 - 청년층의 지역 이동은 청소년·성인진입기(15~19세)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독립과 초기 경력 설계가 이루어지는 20대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후 경력 안정화와 가족구성 경험이 집중되는 30대에는 이동률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생애단계별 이동에 따른 고유출·고유입 지역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10대(진로계획, 고등교육 진학 등)·20대(독립, 초기 경력설계 등)·30대(경력안정화, 가족구성, 일·가족양립 등) 등 생애주기별 주된 과업을 구분한 당사자 맞춤형 지역 인구감소 대응 정책이 필요함.
 - 전반적으로 청년여성은 청년남성보다 지역 이탈 및 수도권 유입 경향이 더 뚜렷하고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이는 청년여성이 지역 이동을 통해 삶의 기회실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지역정책 수립 시 성별에 따른 정주 여건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표 II-2〉 청년층 유출 상위 10개 지역: 시군구 기준

(단위: %)

순번	여성									
	청소년(15~19세)		20대(20~29세)		30대(30~39세)		청년층(20~34세)		전체 연령	
	지자체	순 이동률	지자체	순 이동률	지자체	순 이동률	지자체	순 이동률	지자체	순 이동률
1	전북 남원시	-8.20	경남 남해군	-16.24	부산 중구	-10.37	경남 고성군	-13.16	서울 용산구	-4.06
2	경남 고성군	-8.13	경남 함양군	-15.09	경북 의성군	-7.53	경남 남해군	-13.14	경기 의왕시	-2.75
3	경남 함양군	-7.84	경남 고성군	-14.73	서울 관악구	-7.52	경남 함양군	-11.87	경북 칠곡군	-2.55
4	경북 고령군	-7.62	강원 태백시	-14.40	경북 칠곡군	-6.71	경북 봉화군	-11.60	부산 중구	-2.32
5	경남 함천군	-6.78	경북 봉화군	-13.70	부산 금정구	-6.67	강원 태백시	-10.92	경기 군포시	-2.08
6	충남 부여군	-6.77	경남 하동군	-13.15	경남 고성군	-6.31	경북 의성군	-10.71	부산 금정구	-2.01
7	경북 예천군	-6.69	전북 부안군	-12.46	인천 옹진군	-6.03	경남 하동군	-10.32	경남 고성군	-1.92
8	경북 칠곡군	-6.50	강원 삼척시	-12.44	경북 청도군	-6.00	경북 칠곡군	-9.88	부산 영도구	-1.79
9	강원 속초시	-6.27	충남 청양군	-11.68	경기 동두천시	-5.54	경북 영덕군	-9.33	대구 달성군	-1.77
10	대구 군위군	-6.24	강원 영월군	-11.41	서울 금천구	-5.48	대구 군위군	-9.03	강원 태백시	-1.77
순번	남성									
	청소년(15~19세)		20대(20~29세)		30대(30~39세)		청년층(20~34세)		전체 연령	
	지자체	순 이동률	지자체	순 이동률	지자체	순 이동률	지자체	순 이동률	지자체	순 이동률
1	경북 청송군	-5.66	대구 군위군	-15.13	강원 화천군	-7.78	대구 군위군	-12.51	서울 용산구	-4.65
2	경남 함양군	-5.56	경남 남해군	-12.85	강원 양구군	-7.76	경남 남해군	-10.68	경기 의왕시	-3.05
3	경북 청도군	-5.08	경남 산청군	-11.71	인천 옹진군	-7.59	경남 고성군	-10.25	경북 칠곡군	-2.23
4	강원 속초시	-4.68	경북 성주군	-11.56	부산 영도구	-7.11	경북 청도군	-9.49	강원 양구군	-2.21
5	전북 남원시	-4.45	경남 고성군	-11.49	대구 군위군	-6.63	경남 산청군	-9.47	부산 금정구	-2.08
6	강원 홍천군	-4.29	전남 곡성군	-11.44	서울 관악구	-6.56	충남 부여군	-9.27	강원 철원군	-2.01
7	서울 양천구	-4.18	경북 영덕군	-11.21	부산 중구	-6.34	경북 봉화군	-8.98	부산 북구	-1.98
8	경북 문경시	-3.96	경북 의성군	-11.13	충남 청양군	-6.04	전남 담양군	-8.84	경기 군포시	-1.93
9	경남 함안군	-3.62	경남 하동군	-10.73	강원 철원군	-6.03	경북 성주군	-8.65	대구 달성군	-1.85
10	경북 칠곡군	-3.57	경북 봉화군	-10.59	부산 금정구	-6.03	경북 영덕군	-8.49	부산 사상구	-1.75

주: 노란색 음영=인구감소지역(2024.2.27. 고시), 하늘색 음영=관심지역(2025.12.24. 고시)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구동향조사」, 2024년 KOSIS 공표값에서 가공산출.
 출처: KOSIS(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최종 접속일: 2025.12.30.).

○ 청년층 유출 상위 10개 지역을 살펴본 결과(〈표 II-2〉), 대체로 영남권·호남권에 집중된 가운데 대부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집중되어 있었음.

- 청년층(20~34세)의 순유출률은 여성 경남 고성군(-13.16), 경남 남해군(-13.14), 경남 함양군(-11.87) 순이었고, 남성은 대구 군위군(-12.51), 경남 남해군(-10.68), 경남 고성군(-10.25)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청년여성의 지역 유출은 청년남성보다 규모·강도·집중도 측면에서 모두 더 높았음.

〈표 II-3〉 청년층 유입 상위 10개 지역: 시군구 기준

(단위: %)

순번	여성									
	청소년(15~19세)		20대(20~29세)		30대(30~39세)		청년층(20~34세)		전체 연령	
	지자체	순 이동률	지자체	순 이동률						
1	충남 공주시	18.41	대구 중구	12.59	경기 양주시	15.45	대구 중구	14.31	대구 중구	9.33
2	대구 중구	17.30	인천 중구	10.86	대구 중구	15.03	경기 양주시	12.90	경기 양주시	7.36
3	서울 동대문구	14.71	경기 양주시	9.51	경기 과천시	13.33	인천 중구	9.32	경기 과천시	4.65
4	대전 동구	11.79	서울 영등포구	8.23	경기 오산시	10.79	경기 과천시	7.69	경기 오산시	5.24
5	서울 관악구	10.92	서울 강동구	7.35	전남 무안군	9.27	경기 오산시	7.58	인천 중구	4.73
6	전남 신안군	10.31	서울 중구	5.71	충남 홍성군	7.76	서울 강동구	6.29	서울 강동구	3.77
7	서울 중구	10.30	서울 금천구	5.35	인천 중구	7.08	경기 화성시	5.41	부산 연제구	3.53
8	충남 청양군	9.95	서울 관악구	5.29	충남 예산군	6.60	전남 무안군	5.41	전남 무안군	2.81
9	서울 서대문구	9.38	서울 마포구	4.87	부산 연제구	5.77	충남 아산시	5.33	경기 파주시	2.60
10	서울 성북구	8.96	경기 화성시	4.75	경기 파주시	5.60	서울 영등포구	4.73	경기 안성시	2.92
순번	남성									
	청소년(15~19세)		20대(20~29세)		30대(30~39세)		청년층(20~34세)		전체 연령	
	지자체	순 이동률	지자체	순 이동률						
1	대구 중구	14.56	대구 중구	13.39	경기 양주시	14.52	대구 중구	13.54	대구 중구	9.33
2	충남 청양군	11.17	인천 중구	10.49	대구 중구	14.46	경기 양주시	10.67	경기 양주시	7.36
3	전남 신안군	11.14	경북 울릉군	9.26	경기 과천시	11.74	인천 중구	8.78	경기 오산시	5.24
4	강원 삼척시	9.40	서울 금천구	7.97	경기 오산시	9.73	경기 오산시	7.45	인천 중구	4.73
5	서울 관악구	8.27	서울 관악구	7.80	인천 중구	7.09	충남 아산시	6.09	경기 과천시	4.65
6	경북 안동시	8.02	경기 양주시	7.60	충남 홍성군	6.47	서울 강동구	5.55	서울 강동구	3.77
7	경북 울릉군	7.48	서울 영등포구	7.40	부산 연제구	6.45	경기 화성시	5.12	부산 연제구	3.53
8	서울 동대문구	6.90	충남 아산시	6.40	전남 무안군	6.12	경기 과천시	4.56	경북 울릉군	2.96
9	충남 공주시	6.42	경기 오산시	5.69	서울 강동구	5.95	경북 울릉군	4.52	경기 안성시	2.92
10	경북 영주시	6.36	경기 화성시	5.39	경기 안성시	5.74	서울 영등포구	4.45	전남 무안군	2.81

주: 노란색 음영=인구감소지역(2024.2.27. 고시), 하늘색 음영=관심지역(2025.12.24. 고시)
 자료: 국가데이터터치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구동향조사」, 2024년 KOSIS 공표값에서 가공산출.
 출처: KOSIS(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최종 접속일: 2025.12.30.).

○ 청년층 유입 상위 10개 지역을 살펴본 결과(〈표 II-3〉),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하여 대구 중구, 충남 아산시 등 일부 지방 광역시 및 거점도시로의 순유입이 나타났음. 한편, 일부 비도시 지역에서 청년층 남녀 모두에서 순유입이 관찰된 점 또한 특징적이었음.

- 청소년·성인진입기(15~19세)에서 남성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일부 지방 지역으로 분산 유입되는 반면, 여성은 서울·대구·대전 등 대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져 성인기 초기 단계부터 수도권 또는 대도시로 유입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음.
- 20대 청년여성의 순유입은 대부분 수도권 및 대도시가 주를 이루었으나, 30대 청년여성의 경우 전남 무안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등 비도시 지역에서도 순유입이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었음. 청년남성은 경북 울릉군에서 청소년·성인진입기(15~19세) 및 20대를 중심으로 순유입이 증가한 특성을 보였음.

〈표 II-5〉 청년층 고유출 및 고유입 상위 10개 지역: 시도 간 이동 기준

(단위: %)

순번	유출 지역							
	청년여성(20~34세)				청년남성(20~34세)			
	도시(시·구)		읍면(군)		도시(시·구)		읍면(군)	
	지자체	순 이동률	지자체	순 이동률	지자체	순 이동률	지자체	순 이동률
1	강원 태백시	-8.19	경남 함양군	-9.39	경북 상주시	-6.05	대구 군위군	-7.60
2	경북 문경시	-6.92	충북 영동군	-7.78	경북 문경시	-5.92	전남 담양군	-5.22
3	경북 상주시	-6.26	대구 군위군	-7.60	강원 태백시	-5.23	전남 곡성군	-4.00
4	강원 삼척시	-6.12	강원 영월군	-7.20	전북 남원시	-4.56	경북 청도군	-5.60
5	충북 제천시	-5.89	경남 고성군	-6.98	경북 영주시	-4.13	충남 부여군	-5.45
6	경북 영주시	-4.99	경남 하동군	-6.86	경북 영천시	-3.93	강원 영월군	-7.20
7	충남 논산시	-4.86	경남 합천군	-6.85	경남 거제시	-3.84	전북 고창군	-3.63
8	경남 밀양시	-4.84	경북 영양군	-6.64	강원 속초시	-3.79	경남 산청군	-4.43
9	경북 영천시	-4.80	경북 의성군	-6.58	충남 논산시	-3.78	경북 성주군	-2.63
10	전북 정읍시	-4.60	경북 봉화군	-6.50	경남 통영시	-3.33	경남 남해군	-6.01

순번	유입 지역							
	청년여성(20~34세)				청년남성(20~34세)			
	도시(시·구)		읍면(군)		도시(시·구)		읍면(군)	
	지자체	순 이동률	지자체	순 이동률	지자체	순 이동률	지자체	순 이동률
1	인천 중구	7.73	충북 괴산군	3.94	인천 중구	7.24	충북 음성군	2.59
2	경기 양주시	4.73	인천 옹진군	2.14	서울 관악구	4.22	경북 울릉군	2.13
3	서울 관악구	3.72	전남 영광군	1.92	충남 아산시	3.77	경기 가평군	0.97
4	경기 과천시	3.67	경기 가평군	0.69	경기 양주시	3.27	전남 영광군	0.27
5	서울 종로구	3.22	충남 예산군	0.48	대구 중구	2.96	강원 화천군	0.21
6	서울 영등포구	3.17	충북 음성군	0.39	서울 종로구	2.82	충남 홍성군	0.10
7	서울 중구	2.98	충남 홍성군	0.22	서울 영등포구	2.78	-	-
8	대구 중구	2.97	경기 연천군	0.04	서울 동작구	2.73	-	-
9	서울 서대문구	2.59	-	-	경기 평택시	2.65	-	-
10	경기 하남시	2.55	-	-	경기 화성시	2.44	-	-

주: 노란색 음영=인구감소지역(2024.2.27. 고시), 하늘색 음영=관심지역(2025.12.24. 고시)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구동향조사」, 2024년 KOSIS 공표값에서 가공산출.
 출처: KOSIS(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최종 접속일: 2025.12.30.).

○ 청년층 고유출 및 고유입 상위 10개 지역을 시도 간 이동에 의한 순이동률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권역 간 이동은 생애전망에 대한 실현 의지가 반영된 적극적인 지역 이주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분석 결과(〈표 II-4〉), 청년층 순이동률의 대부분은 시도 간 이동에 따른 유출로 나타나 인접 거점지역으로의 생활권 변경보다는 이주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시도 간 이동에 따른 순유출률이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청년여성은 도시지역에서 강원 태백시(-8.19), 경북 문경시(-6.9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읍면 지역에서는 경남 함양군(-9.39), 충북 영동군(-7.78) 순이었음. 청년남성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경북 상주시(-6.05), 경북 문경시(-5.92) 등이었고, 읍면 지역에서는 대구 군위군(-7.60), 전남 담양군(-5.22) 순으로 나타남.
- 청년층 남녀 모두 시도 간 이동에 따른 순유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 중구(여성 7.73, 남성 7.24)로 확인되었으며, 이 외에도 경기 양주시, 서울 관악구, 서울 종로구, 서울 영등포구, 대구 중구 등은 성별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순유입 지역에 포함됨.
- 일부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시도 간 이동에 의한 순유입이 확인되었는데, 청년여성은 충북 괴산군(3.94), 인천 옹진군(2.14), 전남 영광군(1.92), 청년남성은 경북 울릉군(2.13) 등에서 순유입이 나타남.
- 청년층 고유출 지역은 도시지역(시·구)과 읍면 지역(군) 간에 유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과 산업 구조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성별 인구감소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임.

2. 청년 세대주의 성별 및 가구유형별 이동 사유

청년층은 1인가구에서는 남녀 모두 직업 중심 이동이, 다인가구에서는 주택에 의한 이동이 주된 사유이며, 청년여성은 청년남성보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남.

- 청년층의 성별 및 연령, 가구유형별 지역이동 사유를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세대)」 2024년 원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세대 이동건수 4,487,846건⁶⁾ 중에 세대주 2,989,250명⁷⁾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국내인구이동통계」에서 전입사유는 전입신고서 작성을 통해 수집되며,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로 구분됨. 전입사유는 세대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세대주 중심의 세대 단위 이동건수*를 분석단위로 함(*세대주 및 가구원 전체 이동자 수를 의미하는 인구 단위 이동(명)과 차이가 있음).
- 20·30대 청년층의 전입사유를 1인가구와 다인가구(2인 이상 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1인가구는 ‘직업’, 다인가구에서는 ‘주택’에 의한 이동이 가장 많았음(〈표 II-5〉, 〈표 II-6〉).
 - 1인가구에서는 청년층 남녀 모두 직업에 의한 이동이 가장 높아(여성: 20대 47.4%, 30대 36.1%; 남성: 20대 48.5%, 30대 40.9%), 청년층 남녀 모두 노동중심적 생애전망의 확산이 지역 정주와 이주 결정에도 영향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음. 20·30대 청년세대는 남녀의 이동사유 분포가 거의 유사하였으나 여성은 남성보다 주택, 가족, 주거환경, 기타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한 지역이주 결정이 나타났으며, 특히 40대 이상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남녀 간 차이가 더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음.

〈표 II-5〉 세대주 성별 전입사유: 1인가구

(단위: %, 명)

전입사유		1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체
여성	직업	11.6	47.4	36.1	31.3	26.3	15.0	3.7	33.4
	가족	3.3	7.4	14.2	8.5	7.7	8.4	8.4	8.9
	주택	6.4	17.3	33.2	40.1	44.7	53.1	45.0	31.0
	교육	70.8	15.0	1.0	1.5	0.7	0.3	0.2	8.6
	주거환경	3.7	8.1	8.3	6.4	5.7	6.3	12.1	7.7
	자연환경	0.1	0.3	0.7	1.7	3.0	3.7	7.7	1.8
	기타	4.1	4.5	6.4	10.5	11.9	13.1	22.9	8.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 수	31,178	352,059	183,142	89,014	100,100	89,001	75,227	919,721	
전입사유		1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체
남성	직업	12.9	48.5	40.9	42.0	41.3	28.3	11.8	40.9
	가족	2.8	6.4	13.7	9.2	6.9	6.7	7.3	8.8
	주택	6.0	16.3	32.4	33.0	32.5	39.8	45.1	27.9
	교육	71.1	17.9	0.8	0.7	0.4	0.2	0.2	7.5
	주거환경	2.9	6.3	6.7	5.6	5.5	6.3	9.4	6.3
	자연환경	0.2	0.3	0.5	1.2	2.6	4.8	6.4	1.4
	기타	4.1	4.4	5.0	8.3	10.9	13.8	19.9	7.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 수	23,081	397,596	338,111	164,659	150,909	109,071	44,013	1,227,44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세대 관련 연간자료 원자료 분석.

- 6) 시도 간 이동, 시군구 간 이동, 읍면동 간 이동 유형을 포함하고 같은 읍면동 내 이동은 제외하였음.
- 7) 세대주로서 이동한 경우를 의미하며, 세대주가 아닌 가구원(배우자, 자녀 등)의 1인이동 또는 동반이동 사례는 제외됨. 따라서 세대주 1인가구의 이동은 가구생활의 분리, 독립을 전제로 한 지역 간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다인가구에서는 남녀 모두 주택과 가족 사유가 높았으며, 여성은 특히 30·40대에서 남성보다 가족, 교육 (자녀 교육 추정), 주거환경 및 기타 사유 등의 비중이 높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6〉 세대주 성별 전입사유: 다인가구

(단위: %, 명)

전입사유		1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체
여성	직업	9.4	19.2	12.9	12.2	11.4	7.6	4.8	12.0
	가족	20.2	20.3	16.0	13.0	13.2	13.9	14.6	14.5
	주택	27.9	42.4	54.4	50.2	59.3	64.3	64.0	54.5
	교육	28.5	4.1	6.0	12.4	3.8	0.7	0.7	6.6
	주거환경	5.0	8.4	6.0	5.2	4.5	4.6	5.6	5.4
	자연환경	0.8	0.4	0.5	0.7	1.0	1.5	1.8	0.8
	기타	8.2	5.2	4.3	6.3	6.8	7.3	8.5	6.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 수	499	20,943	71,829	83,717	63,354	25,148	9,655	275,145	
남성	직업	9.8	20.8	15.4	14.6	13.5	9.4	4.3	13.5
	가족	24.6	21.0	13.6	11.7	12.6	13.9	15.0	13.2
	주택	28.4	44.6	59.2	55.6	59.0	62.9	64.7	58.5
	교육	20.5	2.4	3.3	8.6	3.8	0.5	0.3	4.3
	주거환경	5.0	6.5	5.4	5.2	4.9	4.3	5.6	5.2
	자연환경	0.3	0.4	0.3	0.5	1.0	2.3	2.6	0.9
	기타	11.4	4.2	2.8	3.8	5.2	6.5	7.6	4.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 수	317	20,512	149,086	156,905	129,564	75,430	35,130	566,944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세대 관련 연간자료 원자료 분석.

(단위: %)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세대 관련 연간자료 원자료 분석.

[그림 II-3] 세대주 성별 전입사유: 1인가구 vs 다인가구

20~30대 청년층의 지역 이동은 상대적으로 여성은 수도권·대도시 내 정주 경향이 높았고 남성은 비수도권·비대도시로의 이동 경향이 나타나는 등 성별 차이가 있었음.

- 지역이동 유형에 따른 성별 및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비수도권 간 이동, 대도시(특별시·광역시)와 비대도시(중소도시, 읍면) 간 이동을 구분하였음.
- 수도권-비수도권 이동유형을 살펴보면, 20·30대 청년층 가운데 여성은 수도권 내 이동 비율이 높고 남성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비수도권 내 이동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남성이 여정보다 비수도권으로 분산되는 경향이 나타남(〈표 II-7〉).
 - ‘비수도권→수도권’ 이동은 20·30대 청년층에서 남녀 간 차이가 거의 없었음(20대 여성 14.3%, 남성 14.3%; 30대 여성 5.5%, 남성 5.9%). 반면 ‘수도권→비수도권’ 이동은 특히 20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여성 5.2%, 남성 7.8%), 남성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더 높았음.
 - 수도권 내 이동과 비수도권 내 이동에서 성별 차이가 있었는데, 청년층 여성은 남성보다 ‘수도권→수도권’ 이동 비중이 더 높은 반면 청년층 남성은 여성보다 ‘비수도권→비수도권’ 이동 비중이 더 높았음.

〈표 II-7〉 세대주 성별 및 연령별 이동유형: 수도권 vs 비수도권

(단위: %, 명)

이동유형		1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체
여성	비수도권 → 수도권	25.6	14.3	5.5	4.3	4.0	4.3	4.8	8.2
	수도권 → 비수도권	9.0	5.2	4.2	4.9	5.4	6.0	5.3	5.2
	비수도권 → 비수도권	40.6	37.7	36.4	43.3	45.3	44.3	43.8	40.4
	수도권 → 수도권	24.8	42.8	53.9	47.5	45.3	45.5	46.1	46.2
	전체	100.0	10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 수	31,677	373,002	254,971	172,731	163,454	114,149	84,882	1,194,866
이동유형		1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체
남성	비수도권 → 수도권	25.1	14.3	5.9	5.0	4.4	4.0	4.2	7.5
	수도권 → 비수도권	12.5	7.8	4.6	5.1	6.1	7.0	6.0	6.1
	비수도권 → 비수도권	37.7	40.6	38.9	41.7	44.0	44.2	41.1	41.2
	수도권 → 수도권	24.7	37.2	50.6	48.2	45.5	44.9	48.7	45.2
	전체	100.0	10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 수	23,398	418,108	487,197	321,564	280,473	184,501	79,143	1,794,384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세대 관련 연간자료 원자료 분석.

- 대도시-비대도시 이동유형에서, 20·30대 청년여성은 대도시로 전입하거나 대도시 내 이동 비중이 높아 대도시 정주 경향이 강한 반면, 청년남성은 비대도시로 전입하거나 비대도시 내 이동 비중이 높아 비대도시로 분산되는 상반된 경향이 나타났음(〈표 II-8〉).
 - ‘비대도시→대도시’ 이동은 20대에서 여성 20.0%, 남성 18.6%로 여성이 좀 더 높았고, 30대에서는 여성 10.4%, 남성 10.3%로 유사하였음. 여성은 이미 10대부터 대도시로 이주하는 비율이 32.2%로 남성의 25.2%보다 높아 성인 진입기에 첫 구직이나 고등교육을 위해 일찍 이탈하고 이후 생애에서 대도시 내 이동 경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됨. 한편, ‘대도시→비대도시’ 이동은 10대 미만 및 20·30대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는데, 20대 청년층의 대도시 이탈은 남성 13.6%, 여성 10.7%이었고, 10대 미만은 남성 16.6%, 여성 12.7%, 30대에서도 남성 11.5%, 여성 10.9%로 남성이 좀 더 높게 나타남.

- 20대·30대 청년여성은 '대도시→대도시' 이동 비중이 남성보다 높았음(20대 여성 38.0%, 남성 30.2%; 30대 여성 40.8%, 남성 35.7%). 반면 청년남성은 '비대도시→비대도시' 이동 비중이 여성보다 높아(20대 남성 37.6%, 여성 31.3%; 30대 남성 42.5%, 여성 37.9%), 비대도시로 분산되는 경향이 나타남.

〈표 II-8〉 세대주 성별 및 연령별 이동유형: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vs 비대도시(도)

(단위: %, 명)

이동유형		1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체
여성	비대도시 → 대도시	32.2	20.0	10.4	8.9	7.9	8.4	8.5	13.1
	대도시 → 비대도시	12.7	10.7	10.9	10.1	10.7	11.6	11.6	10.9
	비대도시 → 비대도시	32.5	31.3	37.9	44.6	47.4	45.9	45.2	39.2
	대도시 → 대도시	22.7	38.0	40.8	36.5	34.0	34.1	34.6	36.8
	전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사례 수	31,677	373,002	254,971	172,731	163,454	114,149	84,882	1,194,866
전입사유		1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체
남성	비대도시 → 대도시	25.2	18.6	10.3	9.0	8.1	7.6	8.1	11.5
	대도시 → 비대도시	16.6	13.6	11.5	10.7	11.2	12.6	12.5	12.0
	비대도시 → 비대도시	38.0	37.6	42.5	46.2	47.8	47.4	44.6	43.4
	대도시 → 대도시	20.1	30.2	35.7	34.1	32.9	32.3	34.8	33.1
	전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사례 수	23,398	418,108	487,197	321,564	280,473	184,501	79,143	1,794,384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세대 관련 연간자료 원자료 분석.

수도권-비수도권 및 대도시-비대도시 간 권역 이동에서 청년남성은 직업·교육 등 개인 성취 중심의 이동이, 청년여성은 가족을 포함한 정주·생활 요인을 고려한 이동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청년층 1인가구의 이동유형별 전입사유를 살펴본 결과(〈표 II-9〉), 남녀 모두 '직업'에 의한 이동이 가장 높았으나, 남성은 직업·교육 등 개인 성취 중심의 이동이, 여성은 가족 및 정주요건과 관련 이동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편이었음.
 - '비수도권 → 수도권' 이동에서 '직업'이 사유인 비중은 여성 77.5%, 남성 77.2%로 전체 사유 중 압도적으로 높았음. '수도권 → 비수도권' 이동 또한 '직업'이 가장 높은 가운데 여성은 직업 64.2%, 주택 9.7%, 교육 9.2%, 가족 8.2% 등인 반면, 남성은 직업 70.3%, 주택 7.3%, 교육 12.4%, 가족 4.2% 등이었음.
 - '비대도시 → 대도시' 이동사유에서 여성은 직업 68.2%, 주택 9.6%, 교육 6.4%, 가족 5.9%, 남성은 직업 66.6%, 교육 10.7%, 주택 9.3%, 가족 4.9% 순이었음. '대도시 → 비대도시' 이동 사유로 여성은 직업 62.4%, 주택 14.8%, 가족 9.3%, 남성은 직업 71.2%, 주택 11.1%, 교육 5.6% 순으로 나타남.
- 청년층 다인가구에서 여성 세대주는 수도권-비수도권 등 권역 간 이동에 있어 가족 사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남성은 압도적으로 직업 사유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남.
 - '비수도권 → 수도권' 이동에서 남녀 모두 '직업'이 높은 가운데, 남성은 대부분 직업에 집중된 반면(남성 63.6%, 여성 53.4%), 여성은 가족(16.2%), 주택(16.9%) 등 다양한 요건 고려가 남성보다 많았음.
 - '비대도시 → 대도시' 이동 또한 남녀 모두 직업 중심의 이동이 두드러졌고(남성 43.1%, 여성 39.5%), '대도시 → 비대도시' 이동의 경우 여성은 남성보다 주택(여성 35.7%, 남성 34.4%), 가족(여성 22.2%, 남성 19.6%), 주거환경(여성 6.3%, 남성 5.1%) 등 다양한 사유에 걸쳐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권역간 이동에서 남성 세대주는 직업 등 개인 중심 이동 목적이 뚜렷한 반면, 여성 세대주는

개인 중심 동기 외에 가족·생활 등 다양한 정주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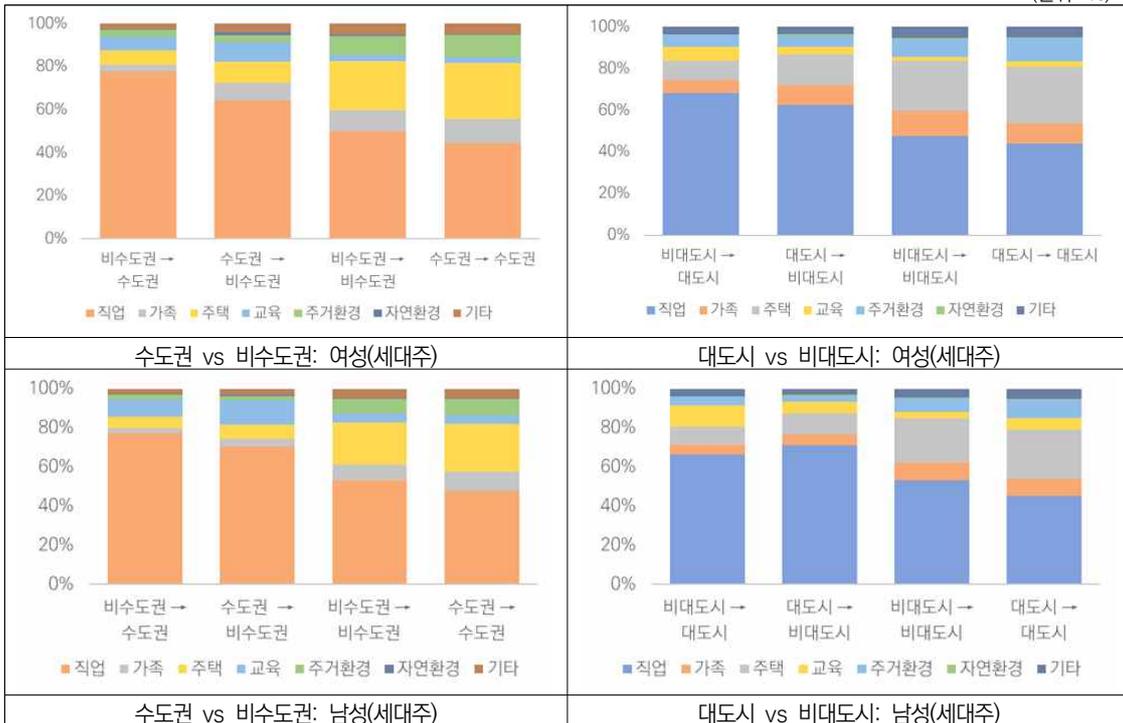
〈표 II-9〉 청년층(20~34세) 이동유형별 전입사유: 1인가구

(단위: %, 명)

전입사유	수도권 vs 비수도권				대도시 vs 비대도시				전체	
	비수도권 → 수도권	수도권 → 비수도권	비수도권 → 비수도권	수도권 → 수도권	비대도시 → 대도시	대도시 → 비대도시	비대도시 → 비대도시	대도시 → 대도시		
여성	직업	77.5	64.2	49.9	44.5	68.2	62.4	47.6	43.8	51.0
	가족	3.3	8.2	10.0	11.2	5.9	9.3	12.0	9.7	9.8
	주택	6.6	9.7	22.7	26.1	9.6	14.8	24.1	27.1	22.0
	교육	6.3	9.2	2.7	2.4	6.4	3.6	1.9	2.9	3.2
	주거환경	3.4	3.2	8.9	10.6	6.1	5.2	8.5	11.1	8.8
	자연환경	0.1	1.5	0.5	0.3	0.1	1.0	0.5	0.3	0.4
	기타	2.7	4.0	5.3	5.0	3.6	3.6	5.4	5.1	4.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 수	21,543	8,956	69,466	95,014	31,810	21,169	61,647	80,353	194,979	
전입사유	수도권 vs 비수도권				대도시 vs 비대도시				전체	
	비수도권 → 수도권	수도권 → 비수도권	비수도권 → 비수도권	수도권 → 수도권	비대도시 → 대도시	대도시 → 비대도시	비대도시 → 비대도시	대도시 → 대도시		
남성	직업	77.2	70.3	53.3	47.8	66.6	71.2	53.3	45.2	55.2
	가족	2.6	4.2	8.0	9.9	4.9	5.2	9.1	8.9	7.8
	주택	6.0	7.3	21.4	24.4	9.3	11.1	22.6	25.1	19.7
	교육	8.7	12.4	4.9	4.2	10.7	5.6	3.4	5.8	5.6
	주거환경	2.6	2.2	7.3	8.6	4.8	3.2	6.8	9.6	6.9
	자연환경	0.1	0.6	0.4	0.2	0.1	0.5	0.3	0.3	0.3
	기타	2.8	3.0	4.7	4.9	3.7	3.1	4.5	5.2	4.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 수	32,933	17,762	100,085	106,872	41,880	34,930	97,350	83,492	257,652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세대 관련 연간자료 원자료 분석.

(단위: %)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세대 관련 연간자료 원자료 분석.

〔그림 II-4〕 청년층(20~34세) 이동유형별 전입사유: 1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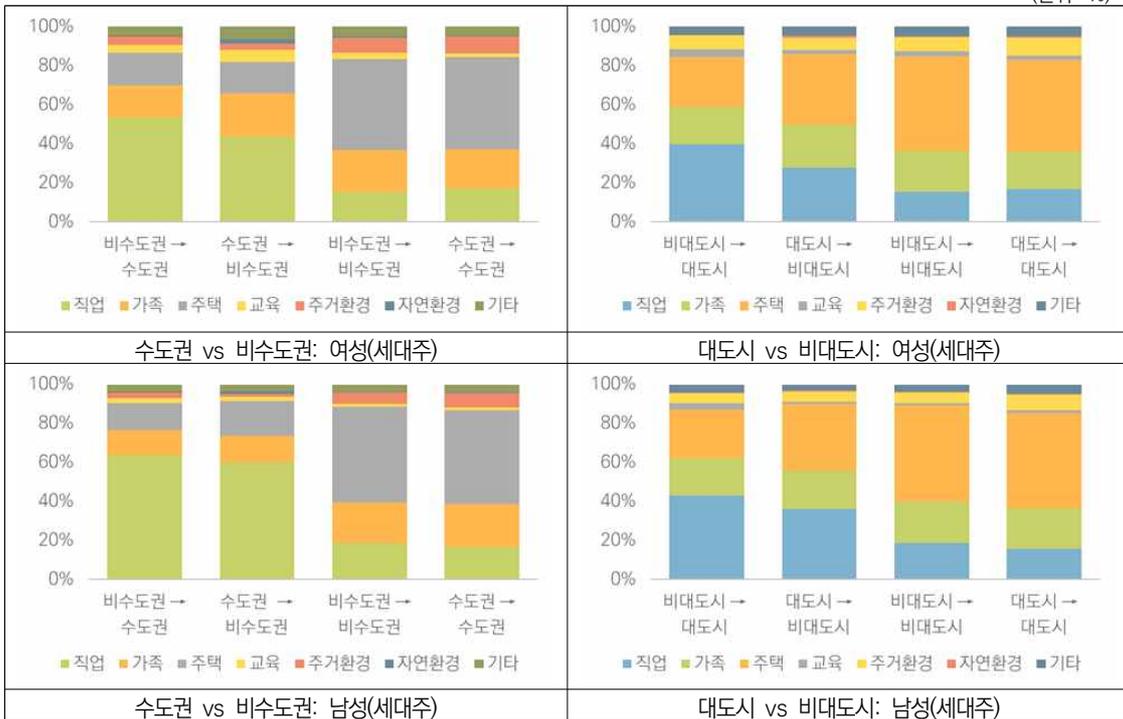
〈표 II-10〉 청년층(20~34세) 이동유형별 전입사유: 다인가구

(단위: %, 명)

전입사유	수도권 vs 비수도권				대도시 vs 비대도시				전체	
	비수도권 → 수도권	수도권 → 비수도권	비수도권 → 비수도권	수도권 → 수도권	비대도시 → 대도시	대도시 → 비대도시	비대도시 → 비대도시	대도시 → 대도시		
여성	직업	53.4	43.5	15.4	17.0	39.5	27.7	15.1	16.6	18.4
	가족	16.2	22.1	21.2	20.0	19.6	22.2	21.3	19.2	20.4
	주택	16.9	16.0	46.7	47.6	25.5	35.7	48.2	47.1	45.2
	교육	4.0	6.2	3.3	1.6	4.0	2.4	2.7	2.2	2.5
	주거환경	4.2	3.3	7.8	8.8	7.1	6.3	7.4	9.3	8.1
	자연환경	0.3	2.3	0.4	0.4	0.2	0.8	0.4	0.4	0.4
	기타	4.9	6.5	5.2	4.7	4.2	4.8	4.9	5.2	5.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 수	573	480	6,479	8,859	1,084	1,407	7,158	6,742	16,391	
전입사유	수도권 vs 비수도권				대도시 vs 비대도시				전체	
	비수도권 → 수도권	수도권 → 비수도권	비수도권 → 비수도권	수도권 → 수도권	비대도시 → 대도시	대도시 → 비대도시	비대도시 → 비대도시	대도시 → 대도시		
남성	직업	63.6	59.6	18.8	16.9	43.1	36.1	18.7	15.8	21.0
	가족	13.0	13.9	20.8	21.7	19.1	19.6	21.1	20.8	20.7
	주택	13.7	18.1	49.0	48.1	24.8	34.4	49.4	48.7	46.1
	교육	2.5	1.9	1.3	1.4	3.4	1.2	1.1	1.5	1.4
	주거환경	3.0	1.5	6.1	7.3	5.1	5.1	5.6	8.1	6.4
	자연환경	0.1	1.7	0.3	0.3	0.2	0.6	0.4	0.3	0.4
	기타	4.0	3.3	3.8	4.3	4.3	3.1	3.7	4.8	4.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 수	707	581	7,994	8,479	1,244	1,544	9,140	5,833	17,761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세대 관련 연간자료 원자료 분석.

(단위: %)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세대 관련 연간자료 원자료 분석.

[그림 II-5] 청년층(20~34세) 이동유형별 전입사유: 다인가구

Ⅲ. 지역 노동시장 특성과 청년여성 이동

1. 지역 고용률 및 성별분리와 청년여성 유출

청년여성의 지역 이탈과 관련된 지역 노동시장 여건을 살펴보기 위해 청년여성 순이동률과 여성 고용률, 산업·직종별 성별 분리수준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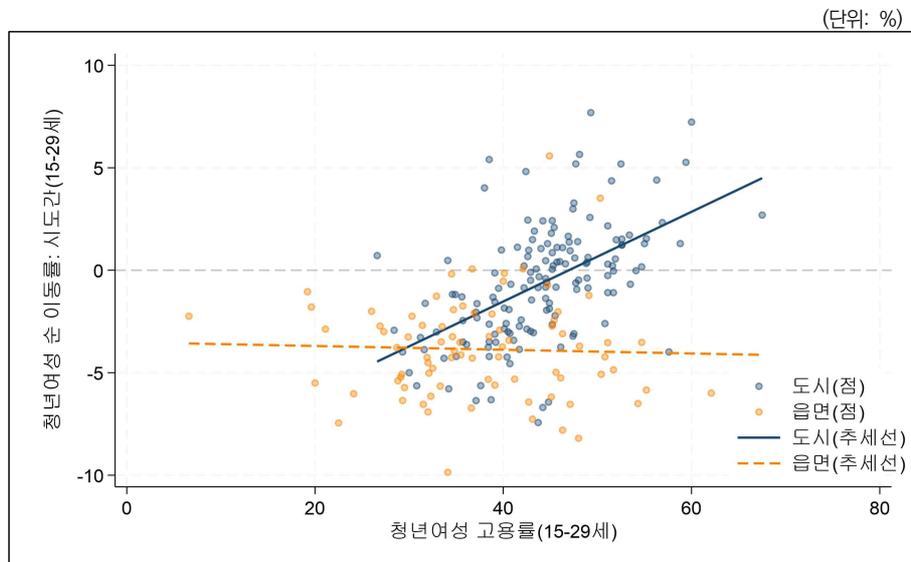
- 청년층은 남녀 모두 노동중심적 생애전망을 지향하기 때문에 지역 이탈의 주된 사유는 일자리로 볼 수 있으며, 낮은 고용률, 높은 성별분리 등 여성의 생애 일자리 선택을 제약하는 지역 노동시장 구조가 형성될 때 청년여성의 지역 이탈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청년여성의 지역 이탈과 노동시장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청년여성 순이동률과 여성 고용률 및 산업별·직종별 성별 분리수준(대분류 기준)과의 상관성을 살펴보았음. 분석단위는 시군구 229개 지역으로, 노동시장 특성에 대한 도시 지역(시·구)과 농산어촌 지역(군)의 여건 차이가 크기 때문에⁸⁾ 도시와 읍면을 나누어 추세선을 비교하였음.
 - 청년여성 순이동률은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비대도시 등 권역간 이동이 생활권 이동보다 생애사적 이주로서 의미를 가지며, 주로 '직업' 사유에 기인하기 때문에 시도 간 이동률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 여성 고용률은 청년여성의 경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의하는 만 15~29세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여성의 일자리 지속 여건을 살펴보기 위해 자녀 출산·양육이 집중되어 여성의 경력단절이 두드러지는 시기인 만 30~49세 연령대를 분석하여 생애 노동 지속 가능성을 살펴보았음.
 -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를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는 Duncan & Duncan(1955)이 개발한 던컨지수(Duncan Index; 상이지수, Index of Dissimilarity)이며, 이는 여성과 남성이 산업·직종 등 특정 범주에 얼마나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지의 정도로 성별 분리 경향을 파악함⁹⁾. 던컨지수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은 남녀가 동일한 분포를 보이는 완전한 균등 상태를, 1은 여성과 남성이 전혀 다른 산업·직종에 종사하는 완전 분리 상태로 지역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수준이 높은 구조를 의미함.
 - 지역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일자리 선택 기회가 제한되고 여성 고용이 저임금·불안정·시간제 중심의 여성 직종에 집중됨에 따라 장기적인 경력 지속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생애 노동 지향이 높은 청년여성들은 더 나은 일자리 여건을 찾아 지역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짐.
-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음. 첫째, 청년여성(15~29세) 고용률과 순이동률 간의 관계, 지역 노동시장의 직종별·산업별 성별 분리수준과 청년여성 순이동률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청년여성의 지역 이탈과 연관된 노동시장 여건을 분석하였음. 둘째, 지역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수준이 여성의 생애 경력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직종별·산업별 분리수준과 가족돌봄 집중 시기 여성 고용률(30~49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음.

8) 예를 들어, 농산어촌 지역은 산업구조상 농림어업종사자, 자영업·가족무급종사자, 계절노동자 등의 비중이 높고, 고령층 비중 또한 높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데, 이를 일자리 형태와 산업구조가 다양한 도시지역의 여성고용 현황과 정량적으로 단순 비교하기 어려움. 따라서 여성의 일자리로 인한 지역이탈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농산어촌과 도시지역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9) HUFFPOST(2017.1.16.). 성평등, 아직도 가야 할 길2: 성별 직종분리, 김선함 기자,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44158#google_vignette (최종 접속일: 2025.12.30.).

도시지역에서는 청년여성 고용률이 높고 성별 분리수준이 낮을수록 청년여성의 순유입이 증가하는 뚜렷한 경향이 나타났음.

- 청년여성 고용률과 순이동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청년여성 고용률이 높을수록 청년여성 순유입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반면, 읍면지역은 고용율과 큰 관련성이 없어 노동시장 질적 특성 및 정주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그림 III-1]).
- 도시지역(시·구)에서는 청년여성 고용률이 높아질수록 순이동률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양(+)의 관계가 나타나 일자리 접근성과 다양성이 확보된 도시지역일수록 청년여성의 유입 및 정주 가능성이 높아졌음.
- 읍면지역(군)에서는 청년여성 고용률이 일정 이상이라도 순이동률이 음(-)의 값에 머무르는 경향이 나타나 고용률 자체만으로는 청년여성의 지역 정주를 설명하기 어려움을 보여줌. 이는 제한적인 직종 구성, 낮은 경력 확장 가능성, 생활환경의 제약 등 다른 질적 요인이 지역 이탈과 관련 있음을 의미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구동향조사」, 「지역별고용조사」 2024년 KOSIS 공표값에서 가공산출.
출처: KOSIS(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최종 접속일: 2025.1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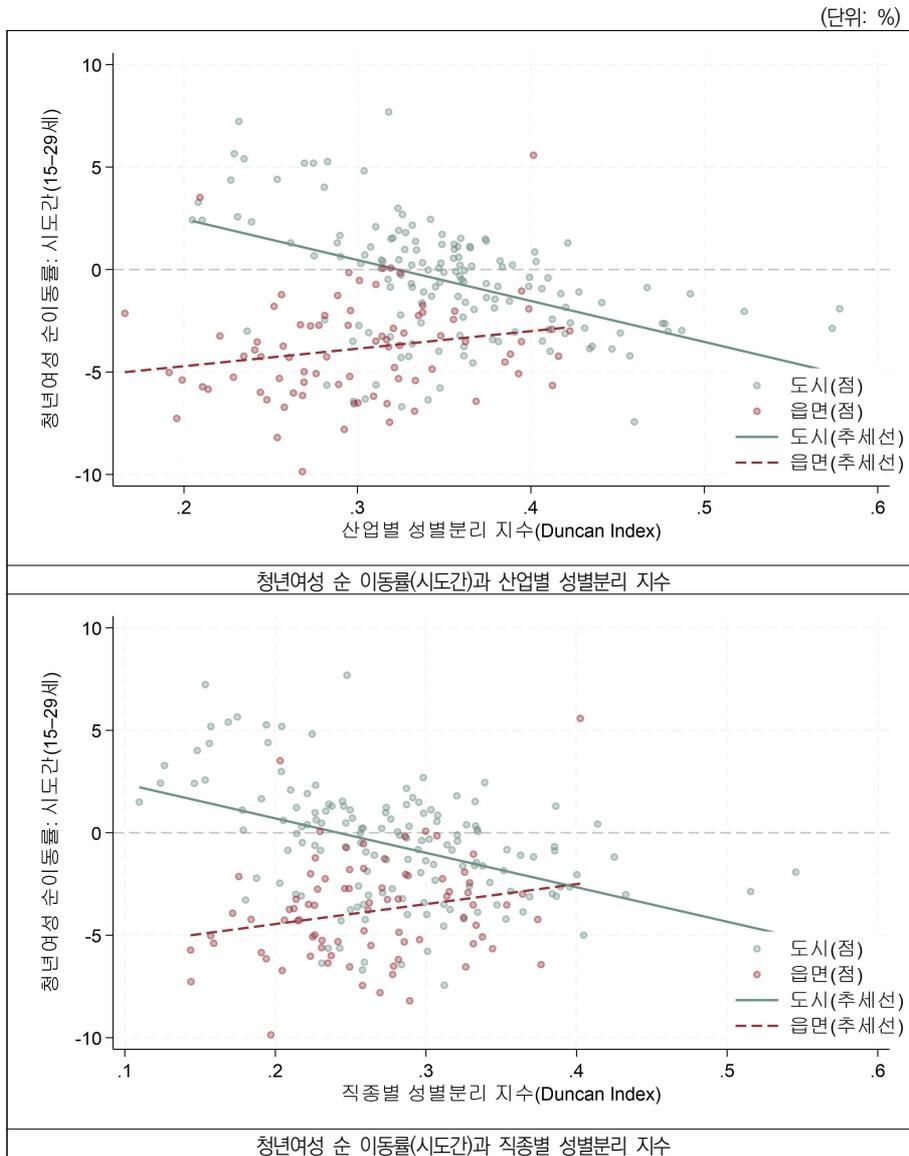
[그림 III-1] 청년여성 고용률과 순 이동률(시도간): 도시 및 읍면 비교

- 청년여성의 순이동률은 지역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수준과 뚜렷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특히 도시지역에서 그 경향이 명확하게 나타남([그림 III-2]). 도시지역은 지역 고용의 산업별·직종별 성별 분리 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여성의 지역 이탈 증가와 뚜렷한 관련성이 있었음.
- 도시지역에서는 산업별·직종별 성별 분리수준이 높아질수록 청년여성 순이동률이 일관되게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도시(실선)의 기울기는 뚜렷한 음(-)의 방향을 보여 성별 분리가 심화된 도시일수록 청년여성의 순유출이 확대되는 패턴이 관측되었음. 따라서 도시지역은 노동시장에서 성별로 분절된 직종·산업 구조가 청년여성의 지속적 정주를 제약하는 주된 요인이 될 가능성을 시사함.
- 읍면지역에서는 성별 분리수준과 청년여성 순이동률 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완만하게 나타남. 읍면의 경우 기울기가 완만하거나 수평에 가까워 성별 분리 수준 변화가 청년여성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도시지역보다 제한적인 수준이었음. 이는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노동시장 구조가 단순하여 성별 분리 지표

가 이동 결정에 미치는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들은 청년여성의 지역 이탈을 노동시장 구조와 연계해 분석할 때, 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성을 뒷받침함.

- 도시지역에서는 지역 노동시장 특성이 청년여성의 정주 가능성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읍면지역에서는 노동시장 조건 외에도 전반적인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소득보장 기회의 질적 구조, 생활 인프라, 가족구성 및 정주 여건, 지역 공동체의 동등한 참여 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지역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청년여성 정주 여건 조성 방안 마련이 필요함.



자료: 1.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구동향조사」 2024년 KOSIS 공표값을 연구자가 가공하여 산출.

2.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2024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출처: KOSIS(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최종 접속일: 2025.1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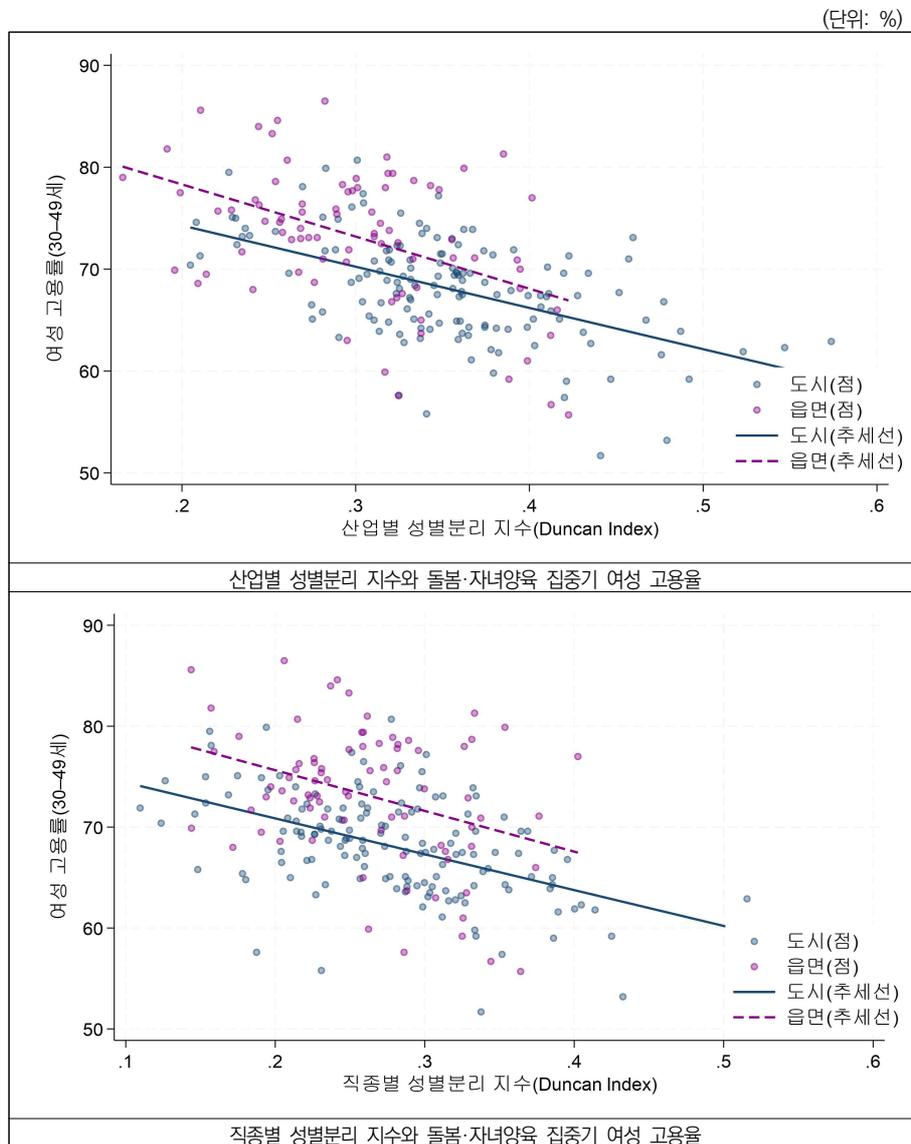
[그림 III-2] 지역 노동시장 성별분리 수준과 청년여성 순 이동률: 도시 및 읍면 비교

2. 지역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와 여성 고용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수준이 높을수록 30~49세 여성 고용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음.

○ 지역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수준과 자녀양육 집중기로 경력단절 위험이 높은 30~49세 연령대의 여성 고용률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도시지역과 읍면지역 모두에서 성별 분리수준이 높을수록 여성 고용률이 낮아지는 음(-)의 관계가 나타났음([그림 III-3]).

- 지역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중·장기적 경력 지속과 생애 고용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자료: 1.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2024년 KOSIS 공표값.

2.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2024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출처: KOSIS(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최종 접속일: 2025.12.30.).

[그림 III-3] 지역 노동시장 성별분리 수준과 여성 고용률: 도시 및 읍면 비교

IV. 요약 및 시사점

청년층 지역이탈은 성별 차이가 뚜렷하므로 노동중심적 생애전망 속에서 청년여성의 기회실현을 제약하는 지역 노동시장 여건과 경력지속 조건을 성별 관점에서 분석하고 성 격차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 및 소멸위기 지역 인구감소 대응의 핵심 과제로 볼 수 있음.

- 청년여성의 지역 이탈은 청년남성보다 뚜렷하며, 주로 수도권·대도시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음, 반면 청년남성의 지역 이동은 상대적으로 비수도권·비대도시로의 분산이 나타남.
 - 청년여성은 지역 이탈의 규모·강도·집중도 측면에서 모두 청년남성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수도권·대도시 내 이동 또는 비대도시에서 대도시로의 유입이 두드러졌음.
 - 노동중심적 생애전망이 청년세대 전반에 확산된 가운데, 청년여성은 지역 내 일자리 기회의 제약과 성별 격차를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이러한 조건이 지역 이동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생애단계별로는 남녀 모두 주로 20대에 이동이 집중되지만, 청년여성은 10대의 청소년·성인진입기부터 대도시로 이주한 후 20·30대에 권역 내 이동을 지속하는 경향이 청년남성보다 더 강하였음.
- 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은 청년여성의 정주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특히 도시 지역에서 그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 도시지역에서는 청년여성 고용률이 높을수록 청년여성 순유입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산업별·직종별 성별 분리수준이 높을수록 순유출이 확대되는 경향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음. 이는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직종·산업의 다양성 및 성별 격차가 청년여성의 정주 가능성에 중요한 조건임을 의미함.
 - 반면 읍면지역에서는 고용률이나 성별 분리수준과 청년여성 이동 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 정량적 노동시장 지표만으로 지역 이탈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줌.
- 성별 분리된 노동시장 구조는 20대 청년기 뿐만 아니라, 경력 안정화와 가족구성 경험이 집중되는 30~40대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여성의 생애 노동 지속성을 약화시키는 경로로 작용함.
 - 도시와 읍면지역 모두에서 성별 분리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출산·양육이 집중되는 30~49세 여성의 고용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음. 이는 지역 노동시장의 높은 성별 분리가 중·장기적으로 여성의 경력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그 결과 청년여성들이 지역에서의 삶을 지속 가능한 선택지로 기대하기 어렵게 하면서 청년기 초기부터 지역 이탈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본 연구 결과는 청년여성의 지역 정주와 이탈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이 지역 노동시장의 성 격차 구조와 양질의 일자리 기회 제공에 있음을 보여줌. 향후 소멸위기지역의 청년정책은 성별 및 지역유형별 차이를 고려하여 청년층의 생애전망에 조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노동시장의 성별 요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 도시지역에서는 성별 분리 완화와 여성의 직종·산업 선택권 확대가 청년여성 유출 완화를 위한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됨. 반면 읍면지역의 경우 노동시장 요인 외에도 소득보장 기회의 질적 구조, 생활 인프라, 지역 공동체 의사결정 참여, 가족·정주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한 삶의 질 측면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
 - 청년층 유출 완화를 위한 지역 인구정책은 청년층의 생애전망 조응을 비롯하여 여성과 남성, 10대, 20·30대 등 생애단계별 주요 과업, 권역 내 이동과 권역 간 이동의 주된 대상과 목적,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의

수요 및 여건 차이를 반영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국정기획위원회(2025.8.).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 관계부처 합동(2025.4.).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
- 김은지·송효진·배호중·선보영·최진희·황정미(2019).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I): 청년층의 젠더화된 생애전망과 정책정합도 분석.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하영(2025).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 여성의 “지방 탈출”을 막을 수 있는가?: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5-37.
- 동북지방통계청 보도자료(2024.4.30.). 경북과 수도권 청년 삶의 질 비교.
- 문영만, 김희경(2024). 성 직종 분리 및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방안-부산지역과 기업규모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32(2), 93-11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시행 2024. 2. 27.]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2024. 2. 27., 일부개정]),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인구감소지역지정변경고시/\(2024-15,20240227\)](https://www.law.go.kr/행정규칙/인구감소지역지정변경고시/(2024-15,20240227)) (최종 접속일: 2025.12.3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시행 2026. 1. 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8호, 2025. 12. 24., 제정]),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인구감소관심지역지정고시/\(2025-78,20251224\)](https://www.law.go.kr/행정규칙/인구감소관심지역지정고시/(2025-78,20251224)) (최종 접속일: 2025.12.30.).
- 연합뉴스(2023.10.31.). 울산 청년·여성인구 유출, 원인은 '취업'... "양질 일자리 필요", 허광무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31031155200057> (최종 접속일: 2025.12.30.)
- 조선미, 성민정, 신우리, 이서현(2023). 지방소멸 대응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서울: 여성가족부.
- 조종오(2025.3.20.).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 2335호.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최종 접속일: 2025.12.30.)
- HUFFPOST(2017.1.16.). 성평등, 아직도 가야 할 길2: 성별 직종분리, 김선함 기자,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44158#google_vignette (최종 접속일: 2025.12.30.).
- KOSIS(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최종 접속일: 2025.12.30.).
- MBC 뉴스(2023.01.13.). 50만 무너진 포항·청년 여성이 떠난다, 장미쁨 기자,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5497_36199.html (최종 접속일: 2025.12.30.)
- Duncan, O. D., & Duncan, B(1955). A methodological analysis of segregation index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0(2), 210-217.